

2024.12.6. No.15



통상 이슈브리프



2024 10대 통상 뉴스

통상연구실 (02-6000-5600, sd.cho@kita.or.kr)

2024년 발생한 다양한 통상 이슈 중 가장 의미있고 파급력이 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. 지난 해 말에 선정한 2023년 10대 뉴스는 ▲디리스팅과 미중 관계 안정화 노력, ▲첨단기술, 친환경분야 대중국 압박 지속, ▲EU의 역내 첨단기술 및 친환경 산업육성, ▲중국의 보복조치와 민간기업 통제, ▲한미일 경제안보협력 확대, ▲국제 공급망 협력 논의 본격화, ▲철강 탈탄소 무역장벽 강화, ▲글로벌 사우스의 부상, ▲이스라엘-하마스 전쟁과 중동정세 불안, ▲AI 거버넌스 표준경쟁 심화 등이었다. 1년간 유지되고 심화된 이슈도 있었으나, 큰 변화를 겪게 된 이슈도 있었다. 이를 통해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비정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.

<2024년 10대 통상뉴스>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트럼프의 귀환과 관세시대의 개막 | ② 폰 데어 라이엔 2.0 EU의 노선 변화 |
| ③ 한국의 FTA 20년, 계속되는 FTA 체결 | ④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|
| ⑤ 중국발 공급과잉 분출과 주요국의 맞대응 | ⑥ 중국 타겟 전세계 수입규제 증가와 불통 |
| ⑦ 첨예화된 경제안보 | ⑧ 탄소규제 강화와 ESG 통상의 진화 |
| ⑨ AI 안전 논의 확대 및 분화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| ⑩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|

1 ▶ 트럼프의 귀환과 관세 시대의 개막

□ 2024년 미국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의 압승으로 결말

- (대통령 선거)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538명의 선거인단¹⁾ 중 58%에 해당하는 312명을 확보하며 226명에 그친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승리
 - 92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결과를 판가름한 7개 경합주(swing states)²⁾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7개 주 모두 승리
- (연방의회 선거) 상원의 1/3을 교체하는 연방상원 선거에서 공화당 의석수가 4석 순증함으로써 총 53석을 확보해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회복했으며, 435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방하원 선거에서는 220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수성

1) 해당 주에서 한 표라도 더 확보한 후보가 선거인단 모두를 독식하는 승자독식제 방식으로, 네브라스카와 메인 주를 제외한 주에서 승자독식제로 진행.

2) 펜실베이니아(19명), 노스캐롤라이나(16명), 조지아(15명), 미시간(15명), 애리조나(11명), 위스콘신(10명), 네바다(6명).

-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미국 중심주의 흐름이 더욱 강해지고, 다양한 관세조치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무력화 시도로 상당한 혼선 예상
 -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보편관세, 상호대응세율, 대중국 고관세를 수 차례 언급했으며,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법이민과 마약유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%의 관세 부과 의사를 밝힘(11/26)

2 폰 데어 라이엔 2.0 EU의 노선 변화

-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대내 산업경쟁력 약화, 정치적 분열 확대, 통상환경 급변 등 악재 속 연임에 성공
 -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유럽의회의 표결 결과 연임에 성공(7/18)했으며, 폰 데어라이엔 2기는 집행위 구성에 대한 의회 승인을 통해 공식 출범(12/1)
 - (산업경쟁력 위기) 그린딜산업계획, 탄소중립산업법 추진에도 불구하고 높은 에너지 가격, 낮은 생산성 증가율,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역내 산업경쟁력 약화
 - (정치적 분열) 유럽의회 선거(6.6.~6.9.) 결과 유럽국민당(EPP)이 다수당을 수성했으나 중도연정 및 녹색당 등 진보는 약화되고 극우 정치그룹이 약진
- 폰 데어 라이엔 2기 EU는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안보 강화 정책을 예고
 - 폰 데어 라이엔은 의회의 신임 투표 당일 발표한 차기 집행위 정책 의제를 통해 기후 정책과 산업경쟁력 간 연계를 높이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힘(7/18)
 - 마리오 드라기 前유럽중앙은행(ECB) 총재는 연간 8천억 유로 추가 투자, 규제 간소화 등 EU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하여 차기 집행을 위한 로드맵 제시(9/9)

3 한국의 FTA 20년, 계속되는 FTA 체결

- 2004년 한-칠레 FTA로 시작된 FTA 추진 정책은 20년간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여 대상국 경제규모 합산 기준 세계 2위³⁾로 결실
 - 다자무역 질서 기반이 약화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FTA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
 - 미국의 IRA '핵심광물 요건'은 FTA 기체결국을 우대하고 있어 한-미 FTA 체결국인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정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음⁴⁾
 -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FTA 체결국(59개국)은 수출 82%, 수입 75%로 큰 비중 차지⁵⁾
 - 지난 5년간 FTA 체결국과의 무역은 연평균 5.5% 증가해 대세계 무역 증가세인 5.1%를 웃돌

3) GDP 85%, 세계 1위는 싱가포르

4)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, 요건 충족을 위해 '핵심광물협정' 체결

5) 통상연구실(2024.5.24.), "한국의 FTA 체결현황 점검", 통상리포트 4호, 한국무역협회.

- 무역 규모의 정량적인 증가 외에도, 경제체제 개선·국내 업체의 경쟁력 제고·소비자 후생 증가 등 다방면으로 기여

□ 정부는 FTA 네트워크를 세계 최고 수준인 GDP 90%까지 확대할 계획⁶⁾으로, '24.11월 기준 8개⁷⁾ 신규 협상 및 5개 후속·개선협상⁸⁾ 진행 중

- 특히 한-GCC FTA('23.12. 타결), 한-UAE CEPA('24.5. 서명), 한-에콰도르 SECA('23.10. 타결) 등 핵심광물·자원·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·아프리카·중동·중남미 신흥시장 거점국과 조속한 발효 추진

4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

□ 정부는 '통상정책 로드맵'을 발표하고,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'연대·공조의 통상을 통한 국익 극대화'를 도모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(8/22)⁹⁾

- (목표) 5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고, 통상네트워크 90%(GDP기준)를 달성해 경제안보 시대를 선도하는 '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'로 자리매김
- (세부 추진과제) 주요국의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, 핵심광물·에너지 등 분야 새로운 협력의 지평 확대 도모
 - 미국·EU·일본·중국 등 4대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,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
 -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·다자협력 및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
 - 글로벌 사우스와의 다층적 네트워크 기반 파트너십 강화 및 기후·환경·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정립 기여

5 중국발 공급과잉 분출과 주요국의 맞대응

□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가 전통적인 철강,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에서 3대 신산업(전기차, 배터리, 태양광)으로 확대

- 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대비 3~9배에 달하는 산업보조금을 투입하며 생산능력을 증가시켰으나, 경기 둔화와 내수 정체로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 공급 발생
 - 과잉 물량은 저가 수출을 통한 밀어내기 방식으로 해소되어 수입국의 산업 경쟁력에 부담을 주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 야기
 - '24년 1~9월까지 중국의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.3% 증가하여 전세계 평균(2.4%)을 상회했고, 같은 기간 수출 단가 하락폭은 신흥국 평균(-2.8%)과 전세계 평균(-1.1%)을 하회하는 -7.2%를 기록¹⁰⁾

6) 관계부처 합동(2024.8.), "연대·공조를 통한 국익 극대화- 통상정책 로드맵".

7) 몽골, 조지아, 우즈베키스탄, MEROCOSUR(아르헨티나, 브라질, 파라과이, 우루과이), 러시아, 한중일, 태국, 말레이시아

8) 중국 서비스·투자(후속), 인도 CEPA(개선), 칠레(개선), ASEAN(개선), 영국(개선)

9) 관계부처 합동(2024.8.), op.cit.

<표1. 주요 산업별 중국의 공급과잉 현황>

구분	내용		
전기차	'23년 중국 내에서 113만 대 초과공급 발생	철강	'22년 전 세계 조강 생산량 54% 중국이 차지, '23년 철강 순수출 \$341억 기록
배터리	'23년 중국 생산량(1.07TWh)이 전 세계 수요(0.95TWh) 상회		
태양광	'23년 중국 499GW 생산, 208GW 수출, '24년까지 중국 생산 능력 1100GW 확대	석유화학	기초소재 에틸렌 2018년부터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. 중국이 2022년 생산 1위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미국, EU, G7 뿐만 아니라 멕시코, 브라질, 튀르키예 등 신흥 국가도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해 반덤핑·보조금 조사 확대 등으로 대응

- 미국과 EU는 관세 부과, 수입규제 등 전통적인 무역 규제 조치 등을 활용하거나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동 대응을 촉구
- G7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과잉생산의 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WTO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발표 (5/26)
- 멕시코는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, 브라질과 튀르키예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

6 전세계 대중국 수입규제 증가와 우리 수출에도 튼 불통

□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철강·자동차 등 경합주 주력산업 노동자 표심을 위해 중국 대상 수입규제 조치를 잇따라 발표

- (대중국 301조 관세 인상) 중국발 공급과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, 배터리, 반도체, 태양광, 핵심광물 등에 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%로 인상(5/14)
- (중국의 멕시코 우회 방지) 중국산 철강·알루미늄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재부과(7/10)
- (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) 韓, 中, 베트남, 멕시코 등 15개국産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자동차 부품 등 알루미늄 압출재가 포함된 제품까지 포괄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국제무역위원회(ITC)가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내림으로써 조사 종료(10/30)

□ 중국발 공급과잉 및 미국의 대중국 규제로 인한 제3국 수출 선회에 대한 우려로 무역장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

- '24년 상반기 전 세계에서 반덤핑 조사 총 169건, 상계관세 조사 총 35건이 신규 개시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'20년 수준(반덤핑 355건, 상계관세 56건)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(WTO)

- EU는 1년간의 조사 끝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7.4%~35.3%의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 (10/29)했으며, 중국은 EU산 브랜드, 돼지고기, 유제품 대상 보복성 반덤핑 조사를 개시

7 ▶ 첨예화된 경제안보

□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수출통제, 보조금 지원, 투자 제한 등의 정책을 적극 시행

- (수출통제) 해외직접생산품규칙(FDPR), 수출관리규정(EAR)과 수출통제조치를 통해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반도체 칩과 장비 등의 수출을 제한¹¹⁾
- (보조금) '22년 제정된 IRA와 반도체과학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및 지원을 본격화하며, 자국 내 첨단기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
- (투자제한) '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규칙¹²⁾'을 통해 미국에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우려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·미국 법인의 투자를 감시·제한('25.1.2. 시행 예정)

<표2.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관련 규제 내용>

구 분	주 요 내 용
수출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FDPR) 고대역폭메모리(HBM) 및 첨단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통해 33개국을 반도체장비 관련 '해외직접생산품규칙(FDPR*)' 면제국으로 지정('24.12.2.) *미국산 소프트웨어·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외국에서 제조되었더라도 美상무부의 수출통제 대상 - (EAR) 군사 최종용도/최종사용자, 안보 최종사용자 수출통제 강화 등의 내용의 수출관리규정 개정안 발표('24.7.29.)¹³⁾, 양자컴퓨팅,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된 임시최종규칙 발표('24.9.5.) 등 - (수출통제) 제3국의 첨단반도체·장비의 대중국 수출통제('24.1월 ASML의 구형반도체 제조장비포함) 확대
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IRA) 일정 요건 충족 시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최대 7,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나, 해외우려기관(FEOC)으로부터 조달한 핵심광물·배터리 부품을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로부터 배제 - (반도체과학법) 반도체 보조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수혜기업들의 우려대상국 내 투자(설비확장 및 기술확장)를 제한
첨단기술 투자제한	<p>미국인은 특정 기술·제품 관련 특정 거래에 관한 투자계획 등을 미국 재무부에 신고</p> <p>① (거래금지) 특정 반도체(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, 고급 직접회로 설계 또는 제조, 슈퍼 컴퓨터 관련 등), 모든 AI시스템 개발 및 관련 거래, 양자컴퓨팅 관련 분야</p> <p>② (의무신고) 직접회로 설계·제작 및 패키징 관련 거래</p>

자료 : 한국무역협회, 미국 상무부·재무부

8 ▶ 탄소규제 강화와 ESG 통상의 진화

□ 주요국을 중심으로 상품의 탄소집약도 관련 환경규제 확산 중

- '24년 EU의 CBAM 4차 보고가 진행된 가운데, 영국, 호주 등 주요국도 유사한 탄소규제 도입을 추진 중

11) 김동현, 박성민(2024.9.6.), “美, 양자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추진...韓, ‘허가면제’서 빠져

12) 미국 재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05('23.8.9.)을 이행하기 위한 “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”을 발표('24.10.28).

13) 홍연서(2024.8.16.), “미BIS,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EAR 개정안 발표”, Issue Report, 전략물자관리원.

- 미국은 118대 의회('23~'24)에서 다수의 탄소세 관련 법안이 발의·논의됨에 따라 탄소세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

* Prove it Act(양당), Foreign Pollution Fee Act(공화당), Market Choice Act(양당), Clean Competition Act(민주당) 등

-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노동권 보호와 환경훼손 방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, 특히 미국과 EU는 무역정책을 통해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

- (공급망실사지침) '27.7월부터 기업 내 공급망에서 인권·환경 문제 발생 여부를 실사하는 의무가 적용되며 미준수 시 금전적·행정적 제재 부과(7/25발효)
- (강제노동) 미국은 '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'('21.12.23. 제정)으로, EU는 '강제노동 결부상품 수입금지 규정'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·유통을 금지(11/19 채택)

9 AI 안전 논의 확대 및 분화되는 디지털 통상규범

- 급격한 AI 발전에 따라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안전에 대한 국제 논의 본격화

- '24.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G7, EU, 싱가포르, 호주, OECD, UN 및 글로벌 기업이 참석하여 각국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AI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
- '24.8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인 EU의 인공지능법(AI Act) 발효
 - AI법은 AI 시스템의 위험 정도를 허용될 수 없는 위험, 고위험, 제한된 위험, 최소한의 위험으로 분류하여 차등 규제
 - '25.2월 시행되는 금지 대상 AI 관련 규정과 '25.8월 시행되는 범용 AI 관련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은 '26.8월부터 시행 예정

- 미국의 일부 디지털 통상규범 지지 철회,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엄 종료 위기 속, 한국은 DEPA 가입에 성공

- 미국은 '23.10월 WTO 공동성명 이니셔티브(JSI)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, 데이터 현지화 제한, 소스코드 강제 공개 금지 등 일부 디지털 통상 규범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후 명확한 정책 표명 부재
 - USTR은 개인정보 보호 및 경쟁 문제 등 빅테크 규제를 위한 '정책적 공간'이 필요하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
- '24.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인도, 인도네시아, 남아공 등이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 연장에 강력히 반대했으나, 차기 각료회의까지¹⁴⁾ 연장에 합의
- '24.5월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(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, DEPA)¹⁵⁾ 발효 이후 첫 가입국이 되었으며, 캐나다, 중국, 페루, UAE 등의 가입 논의가 진행 중

14) 정확히는 차기 각료회의 또는 2026.3.31.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연장되었으나,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.

15) DEPA는 2020년 뉴질랜드, 싱가포르, 칠레 등 3개국 간 체결된 디지털 통상 협정.

10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

□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OECD 중심으로 140여 개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이 2024년 사업연도부터 주요국에서 시행

- 별도의 고정사업장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저세율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로열티 등을 수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
-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(약 1조 원)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%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
 - 기업의 부담 세액이 글로벌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납입규칙, 소득납입보완규칙 등에 따라 추가 세액을 과세
-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을 완료했으며 영국, 일본, 캐나다, 독일, 프랑스 등 주요국도 입법을 마치고 2024년 사업연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

□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 부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됨에 따라 미국에서의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

-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법인세율을 최대 15%까지 낮추고, 글로벌 최저한세와 유사한 규정이 담긴 TCJA*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독자적인 국제조세 과세 체계를 구축할 전망

*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(Tax Cuts and Jobs Act, TCJA)